

6.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7년 10월 26일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 상정일자 :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년 11월 23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 제안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범위 조정 및 근거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구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조정 등(안 제7조제1항).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의 사업내용 구체적 명시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현행법에 맞게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사업추가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사업내용 명확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거기본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마련
 - 다른 법률 사업 시행근거와 위탁사업 범위의 명확화
-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제3항).
- 공사의 재산 무상사용 규정 삭제(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서오섭)

○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49조제2항²⁾의 규정에 따라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의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도시재생사업, 전통시장 육성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시행 근거를 신설하는 등 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 안 제7조제1항에서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의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한 것은 도시공사의 사업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도시공사의 사업범위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제49조(설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³⁾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향후 도시공사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안 제20조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률에 근거없이 지방공기업의 재산을 무상사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 ▶ 이상에서와 같이, 이 조례는 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확대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도시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답 변 |
|--|--|
| ○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공사의 사업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는데, 이처럼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면 민간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이는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에 양보하여 민간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 이 조례안의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도시공사의 참여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구체화 하는 부분이며, 도시재생사업 등은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 향후로도 우려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